

# 입법정책정보



대전광역시의회

#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	1
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1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3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6
1. 서울특별시 약자동행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	6
2.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	8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9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	12
1. [미국]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례 .....	12
2. [독일]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 .....	13

## I 상위법령 제 · 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3.] [여성가족부령 제186호, 2023. 3. 23., 일부개정]

#### □ 제 ·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요건 중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근무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관련 시설 · 기관에서 근무했던 건강가정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종사하고자 할 때 종전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음.

이러한 정책환경과 법령 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존 시행규칙 인용 규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바로잡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요건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기간 요건의 개정

- 1)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개편되었으며, 가족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센터 외 타 시설 · 기관의 근무경력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요건을 개정하게 됨에 따라 가족센터 근무자 경력인정과 함께 가족센터 외의 시설 · 기관 근무자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근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 조항의 인용 조항 수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을 정하는 조항은 법 제20조제6항이므로, 인용조항을 정확히 하도록 함.”

#####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요건 중 “영양사”의 근거법령 인용 조문의 개정

“영양사의 면허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국민영양관리법」이므로, 인용법령을 정확히 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제공>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내에 별표 4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별표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의2제2항 관련)**

마.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7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8호, 2023. 3. 28., 일부개정]

## □ 제 · 개정 이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2022. 8. 12. 시행)

제9조(위원회의 구성)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제정]

## □ 제 · 개정이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848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중앙회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자율방범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2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방법초소 등의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 시·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자율방범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3조, 제4조 및 제5조)

-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시·도지사는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경찰청장은 자율방범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제6조 및 별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또는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 □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4조(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초소 개선사업
2. 방법 장비·복장 구입
3.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4. 지역 합동 순찰 등 방법 활동을 위한 연합회의 합동캠페인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23. 4. 27.] [서울특별시조례 제8681호, 2023. 4. 27., 제정]

#### □ 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악화로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존이 위협당하고 지속적인 양극화·빈부 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약자의 계층이동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약자와의 동행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약자동행 지수 개발 등으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약자에 공정한 기회제공 및 적극적 배려 등으로 약자동행 가치 확산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약자”와 “약자동행” 등 용어 정의(제2조)  
나. 약자동행 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다. 약자동행 수행의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라. 약자동행을 위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제6조)  
마. 다양한 약자 발굴과 대상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가능(제7조)  
바. 약자동행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사. 약자동행 관련 사업 성과를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약자동행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  
아.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 약자동행 지수 및 통계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  
자.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제12조)  
<법제처 제공>

#### □ 참고사항

- 국내최초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함: “약자”와 “약자동행”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2.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정책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약자동행 지수’ 지표 개발 추진

제9조(약자동행 지수 등) 시장은 분야별 약자동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지수(이하 “약자동행 지수“라 한다)를 개발·관리할 수 있다.

#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시행 2023. 4. 11.] [경기도조례 제7616호, 2023. 4. 11., 제정]

## □ 제정이유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사업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주민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단,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제처제공>

## □ 참고사항

### ○ 국내최초 디지털 재난을 규정하고 행정지원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최장기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가 발생.

이를 계기로, 디지털재난시 대응체계를 구축,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및 플랫폼노동자 등의 피해 복구 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담고 있음.

###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안건번호:의견23-0002 / 요청기관:환경부]

##### □ 의뢰안전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각주: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8호 참조), 이하 같음.)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구역(각주: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기 위해 하천의 점용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함)를 받아 공사(각주: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가 아닌 공사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중인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이하 “유입하천수”라 함)를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그 하천(각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경우가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유입하천수의 배수가 하천의 유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천수를 특정 “용도(쓰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천수의 사용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오로지 공사 현장 유입하천수를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하천의 인근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라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하천수의 사용으로 열거된 예시사항은 “생활·공업·농업”과 같이 하천수를 재료나 자원으로서 사용하거나 “발전·주운” 등과 같이 하천수의 흐름을 전기의 생산이나 선박의 운항에 사용하는 것인바, 오로지 유입하천수의 배제만을 목적으로 그 하천수를 전량 배수하는 것이 같은 항 전단에서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하천법」 제95조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유입하천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하려는 것이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에 해당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미국]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례

#### □ 주요내용

- 최근 우리나라에 1인가구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의 경우는 29세 이하의 연령층 못지않게 7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도 높다. 1인가구, 고령자가구 등은 범죄예방 측면에서 취약한 특성을 갖는다.
- 1인가구 및 고령자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 증가 현상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겪게 되는 여러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예로 가정폭력, 스톱킹,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겪는 임차인에 대하여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지로 조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보호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연방법은 가정폭력 및 스톱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에 대하여 긴급이주를 허용하고 있고, 각 주(州)의 법률은 범죄피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가 향후 우리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처] 국회법률도서관([원문](#))

#### □ 참고사항

##### <타 시·도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7.)
- 부산광역시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시행 2022.12.28.)
- 대구광역시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2.)

##### <우리시 관련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8.)

## [독일]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

### □ 주요내용

-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겨울철 ‘난방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EU는 회원국 내에 직접 적용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을 제정하였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공급하던 천연 가스(PNG) 공급이 중단되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EU이사회에 신속한 대응이다.
-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가격 중 특히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2022년도 4월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지급법(HeizkZuschG)」을 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패키지법률’인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천연가스 및 열 관련 개정법」과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전기 관련 개정법」을 제정하여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실행하였다.
-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요금이 최근 1년 사이 약 40%까지 급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에너지이용권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법률도서관([원문](#))

### □ 참고사항

#### <관련 기사>

“대전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첫날, 1시간 만에 '400건' 접수”, 충청투데이, 2023.3.21. ([해당기사](#))

‘대전시 소상공인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 지원 첫날, 시작 한 시간 만에 40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최근 치솟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소상공인들은 대전시의 이번 지원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온라인 신청 건수는 2500건을 돌파했다.’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시행 2016.03.15.)
-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30.)